

미국 및 한국의 고령화: 세계 고령화 위원회 권고안 재점검

Aging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examin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Global Aging

Paul Hewitt 미국 세대간 평등연구소(Americans for Generational Equity) 회장

지난 2002년 '세계 고령화 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Aging)는 각국의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재정적 악영향 해결을 위한 '정책적 권고안'(Recommendations)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 위원회의 연구 결과와 권고안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월터 먼데일(W. Mondale) 전 미국 부통령, 류 타로 하시모토(R. Hashimoto) 전 일본 수상, 칼 오토 필(Karl Otto Pohl) 전 독일 분데스뱅크 총재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특별 위원회인 '세계 고령화 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Aging)는 2002년 지역 및 국가별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재정적 악영향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권고안(recommendations)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 위원회의 연구 결과와 권고안을 미국과 한국의 고령화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¹⁾.

미국과 한국의 도전과제는 현저하게 다르다. 미국에서는 노령층에 지급되는 1인당 의료비의 급증에 전후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의 은

퇴까지 가세하여 "정부예산의 고령화"(aging of the budget)가 문제시 되고 있다. 미국이 전통적인 노령급여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 부문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억제되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이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지배적인 노인복지국가 모델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가족중심 복지국가(family-centered welfare state)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적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일반적이면서 대규모 변화를 야기시키는 세계적인 추세 중 하나이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보건 수준의 향상은 더 나은 영양 상태, 더 좋은 약, 그리고 손 씻기나 물 끓여 먹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건강 습관 개선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아동 사망률 감소로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인구 연령 구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류 역사를 살펴 볼 때 여성은 태어난 자녀 중 두 명이 생존하여 출산하기 위해 최소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들은 아동 사망률이 급감하는 가운데 출산율을 생존율에 맞춰 조정하는데 실패하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단계 중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는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은 더 길어지고 아동인구는 급증함에 따라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median ages)이 하락하게 된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마침내 출산율이 감소세로 돌아서면 전체인구의 중위연령은 상승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이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출산율과 밀접한 수학적 연관성을 갖는다. 1970년대 초반, 선진국에서는 인구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로 인해 새로운 고령화 단계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각 세대별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은 자신의 가임 기간 동안 평균 2.1명의 자녀를 출산해야만 한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인구대체수준을

하회하는데다 노인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어 말 그대로 향후 몇 세대에 걸쳐 전체인구의 중위연령 상승은 엄청나게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 세계 고령화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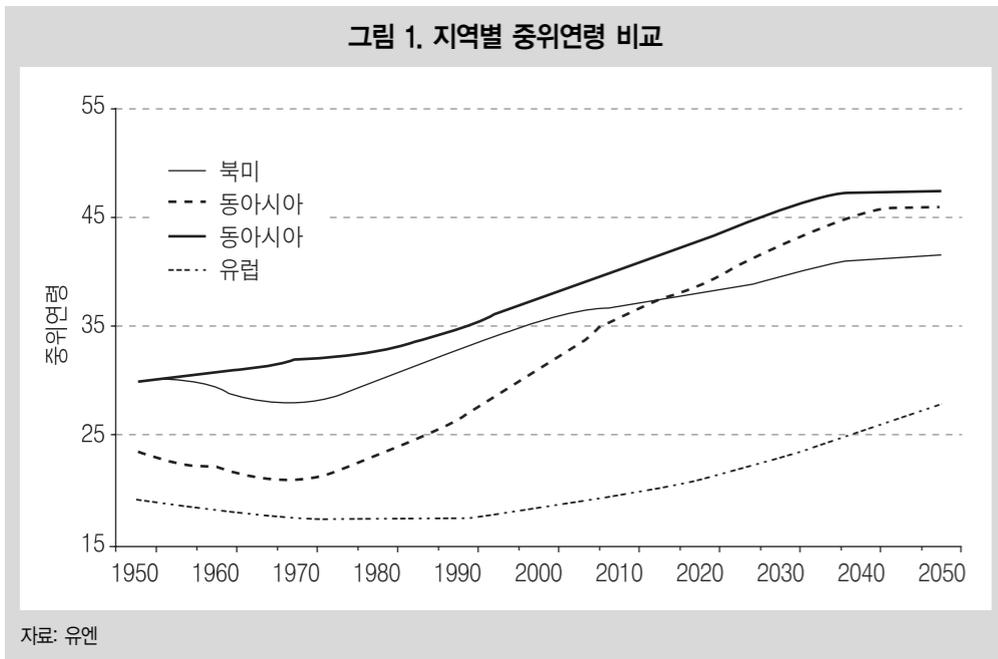
- 1950년에 중위연령 30세 이상인 국가는 15개국에 불과.
- 2000년에 중위연령 30세 이상인 국가 62개국. 일본과 이태리의 중위연령은 40세 이상.
- 2050년까지 약 89개국의 중위연령은 4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이 중 19개국의 중위연령은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세계의 중위연령은 현재 29세에서 2050년 38세로 증가할 전망.

세계 각 지역과 국가의 고령화 속도는 모두 다르다. 유럽이 세계 최고령 지역이기는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심각한 베이비 붐이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출산율도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베이비 붐을 겪은 북미와 동아시아에서는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중위연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의 출산율은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출산율에 비해 인구대체수준에 훨씬 더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지역 중에서도 미국의 중위연령은 앞으로 가장 느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살펴볼 때 한국을 제외하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는 저개발 국가이거나 후기 공산주의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베이비 붐 이후 출산율이 급감한 바 있다. 한국

1) Commission on Global Aging, *The Challenge of Global Aging: Report to World Leaders on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Global Aging*, December 29, 2001.

그림 1. 지역별 중위연령 비교



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중반이 되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 펀더멘털(fundamentals)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세계 고령화 위원회는 밝혔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 **노동 병목현상:**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는 노동력 공급이 해마다 감소할 것이며, 이로써 한 산업이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의 축소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경제학자 조셉 슐페터

표 1. 중위인구 증가 예상국가: 2010~2050년

2010~2050년 사이에 중위연령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국*		2050년도 중위연령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국*	
	연령 증가폭		연령 증가폭
대한민국	17.8	대한민국	17.8
아르메니아	15.7	일본	15.7
쿠바	15.6	싱가포르	15.6
멕시코	15.6	우크라이나	15.6
니카라과	15.2	슬로베니아	15.2
몰도바공화국	15.0	슬로바키아	15.0
이란	14.7	리투아니아	14.7
시리아 아랍 공화국	14.7	체코 공화국	14.7
우즈베키스탄	14.6	쿠바	14.6
몽골	14.5	불가리아	14.5

주: *인구 2백만 명 이하인 국가는 제외됨.
자료: 유엔(2006) 및 대한민국 통계청(2006).

(J. Schumpeter)는 노동력과 자본이 사양산업으로 부터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가리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노동력이 감소하는 국가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부문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성이 가장 낮은 산업활동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간 대규모 노동 이동은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평생고용(lifetime employment) 모델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 ◆ **저축률 하락:** 고령화 사이클 중 어느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급증하는 노령층이 퇴직과 함께 예금 인출을 하게 되고, 전체인구 중 높은 저축률을 보이던 연령군(35~60세)의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축을 할 여력은 ‘부(負)의 저축’(dissaving)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통화에 대한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 ◆ **생산성 증가율 둔화:** 앞서 언급한 노동력 공급에 대한 영향 이외에도 노령 노동인력은 구시대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혁신적 활동을 하거나 기업가적 리스크를 감당할 가능성이 적다. 노령 노동인력의 이 같은 특성은 사양 산업을 떠오르는 산업으로 적극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 **국내총생산 하락 및 일부 경우 마이너스 성장:**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근로자수에 근로자당 생산성을 곱한 값이다. 노동력 성장이 제로(0)인 국가는 생산

성 비율만큼만 성장하는 반면 노동력이 감소하는 국가는 노동력 감소 속도가 생산성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 GDP가 감소하는 고령화 침체기로 접어들기 십상이다.

- ◆ **만성적 재정 위기:** 기존의 사회모형(social model) 하에서는 GDP의 일부를 차지하는 노령급여 지출이 단지 경제적으로 힘든 몇 년 동안만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해마다 무기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재정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 **근로자의 생활수준 점진적 향상 또는 하락:** 정부 재정 지출이 임금인상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세입 증대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근로 가정의 생활수준은 하락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급여(benefits)가 줄어들면 부양인구의 생활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 ◆ **산업분야의 만성적 과잉생산능력:**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는 국가에서 내수 의존적인 산업은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 감소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주택 보유자들은 평생 자신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장기 자금조달도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문제의 양상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학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국제 금융위기 가능성 확대:** 많은 국가의

경우, 기존의 사회모형 하에서 정부 지출이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기한 증가할 전망이며, 일부 (또는 모든) 국가는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재정 적자를, 시장이 더 이상 채무 위험성을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수십 년간 매년 경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 정부의 신용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로써 메가톤급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3개항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단, 이들 권고안 모두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 **연금 지급 사전 확보:**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 의존하지 않고도 퇴직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별 지급자족 능력이 더욱 커질수록 은퇴자에 대한 현금이전(cash transfer)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 ◆ **이민:** 고숙련 이민자들은 기술이나 기업 경영과 같은 고부가가치 직업군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저숙련 이민자들은 아동 및 노인을 돌보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예를 들어) 고학력 출신 여성들이 자신의 시간을 고부가가치 활동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근로연수 연장:** 노령층 인구를 고용하게 되면 GDP와 세입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사회보장급여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이 같은 개혁 방식은 모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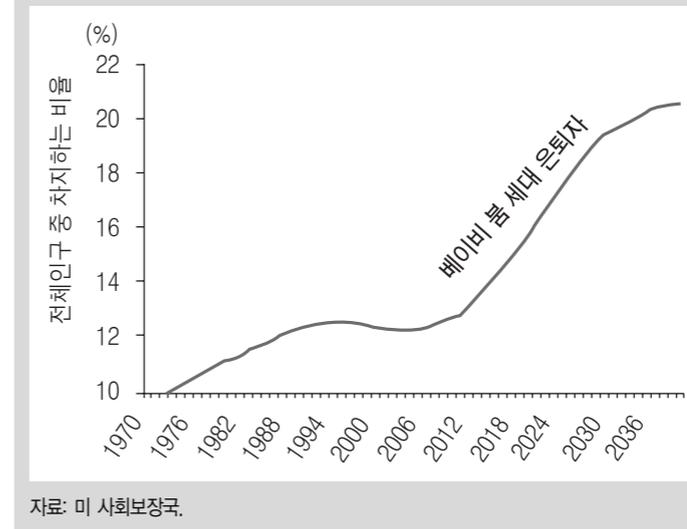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에는 제약이 따른다. 일단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노동인력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 ◆ **여성에 대한 기회 확대:** 마찬가지로 여성의 수익능력 증대와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GDP와 세입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 **“고령화 사회 산업”으로의 이동 촉진:** 자본과 노동력을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전환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 **국제적 대화:** 고령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동료집단 간 압력”(peer pressure)은 국내 재정적자가 세계적인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금융관리의 필수 요소에 조기경보체제와 정기적인 고령화 정상회담을 포함시켜야 한다.

2. 미국의 고령화와 재정

동 위원회의 연구 결과와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겠으나 위원회는 미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인 급속도로 비대해져 가는 의료비용구조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장기적 인구분포가 근본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다.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약간 밑돌고 있으며, 매우 높은 이민율 덕분에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시장

그림 2.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1970~2040)



성장을 당분간 기대할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미국이 안고 있는 최대 난제는 예산, 특히 의료비 예산이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도전과제는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의 고령화에서 비롯된다. 이 세대는 앞으로 22년 동안 하루 평균 11,000명이 노령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이로써 미국의 노인 인구는 2038년에 대략 현재의 두 배가 된다. 이 같은 고령인구 급증 문제는 노인 인구, 특히 7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1인당 공공 의료비 지출이 유난히 높다는 점만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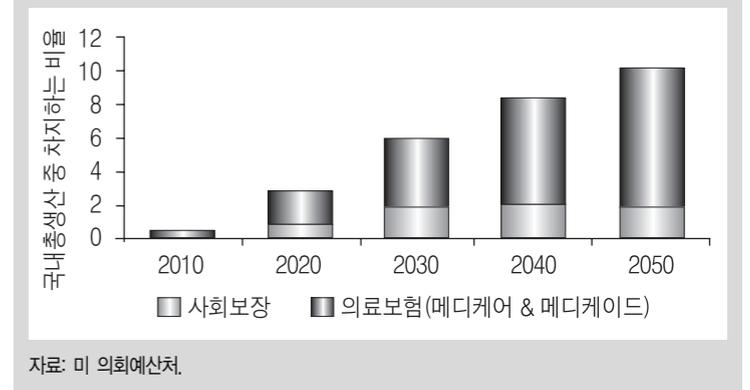
노인 인구의 빠른 성장

과 엄청나게 높은 1인당 의료비용이 맞물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GDP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는 23년 후에는 GDP의 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2007년과 2050년 사이의 노령급여 지출 상승분의 80%가 메디케어(Medicare: 미 연방정부의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회보장)와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 주정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러한 지출 상승분에 대한 자금을 세울 인상만을 통해 충당하고자 한다면,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미래에 훗날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감당해야 할 부담금은 매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의회예산처(CBO)가 최근 실시

그림 3. 프로그램별 노령급여 지출 증가 전망(2007~2050)



한 분석에서는 금세기 말이 되면, 세율인상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기업과 고소득가구에 대한 한계세율이 8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비용을 고려 요인에 포함시키면, 2040년까지 총 임금의 12%가 추가로 흡수되는 종합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경우 2020년 중반이 되면 일반적인 미국 근로자의 비의료부문 소비는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²⁾.

미국인들은 대체로 높은 세율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정부 지도자들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운용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글로벌 위기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는 정책적 간섭을 받기 쉽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50년 예상 연령구조보다 더 고령의 연령구조를 가진 일본의 공공 의료보험 지출액은

GDP의 9%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의사가 일본의 의사보다 어째서 두 배나 많은 수익을 올려야 하는지, 또는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유명 브랜드의 약품 가격을 일본인 소비자들보다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어째서 두 배나 높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 미국 의료부문의 제품과 서비스 가격 억제는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3. 한국의 인구감소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전후 평균수명은 엄청나게 높아져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미

국보다 높음). 한국인들은 과거에 비해 무병장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가리켜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라고 칭할 수도 있겠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모두 1950년대 이후 출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에 근접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출산율은 1983년에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약 1.1명으로 대체수준의 약 47%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40년 동안 미국 인구는 41%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 인구는 13% 감소하다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연령구조 그래프의 변천 양상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잘 나타난다. 1960년 연령구조는 바닥에 젊은 세대가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연령

구조는 더 이상 피라미드 모양을 띠지 않고 있으며 바닥은 좁고 중간은 두터워지고 위는 뾰족한 장식용 주발 모양을 하고 있다. 2050년 전망치는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다. 19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아동 18명의 비율이었지만, 2050년에는 아동 1인당 노인 3명의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령층에서도 가장 약하고 의존적인 연령군인 80세 이상의 한국인 수는 향후 40년간 6배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전통적인 근로연령층인 20~64세 인구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잠재적 근로계층은 35%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일차적 영향은 생산가능인구에 엄청난 부양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연금수급 노령층 부양 비율은 향후 41년간 4.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³⁾.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재정적·경제적 압박을 증폭시키게 된다. 하지

그림 4. 의료비 증가가 미국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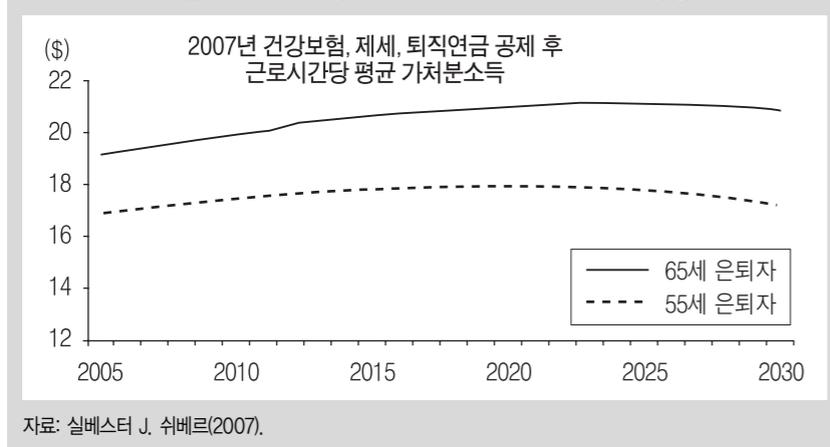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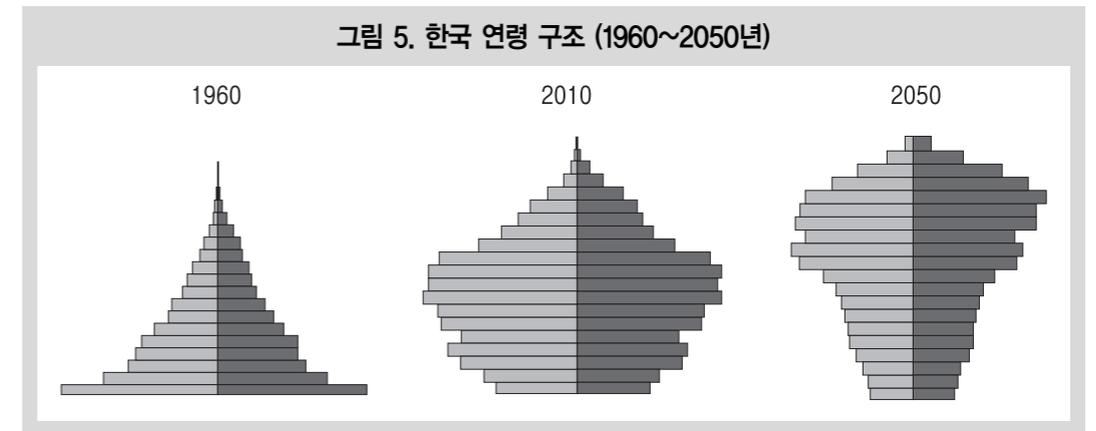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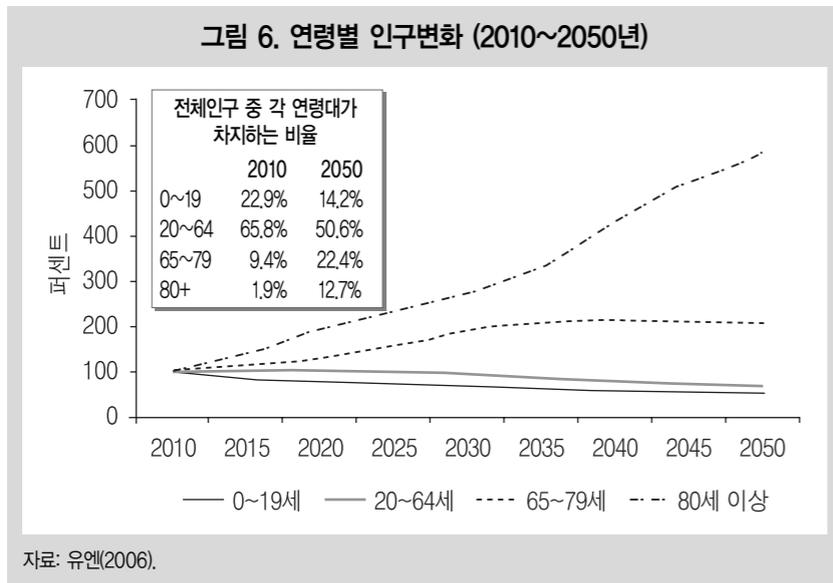


그림 5. 한국 연령 구조 (1960~2050년)



2) Schieber, Sylvester and Paul Hewitt, "Demographic Risk in the Industrial Societies: Independent Population Forecasts for the G-7 Countries", *World Economics*, Vol. 1, No. 4, 2001.

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0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2001.



만 이들은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인구감소 현상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몇 년 또는 몇 십 년 내로 어떠한 정책적 백약도 무효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앞으로 200년간 인구의 97%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당장의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200년은 현실성 없는 시간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추이는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일단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중간 단계가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통계청의 2050년 전망치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올해 태어난 아기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국 인구는 최소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20년간 수립될 정책은 약동하는 독립 국가로서 한국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표 2. 한국의 여성인구: 20~40세

2000	8,065,000 ¹⁾
2050	3,713,000 ²⁾
2100	1,514,133
2200	282,927
2300	50,852
2400	9,140
2500	1,643
2600	295
2700	53
2800	10

주: 1) 실제치.
2) 유엔 추정치.

4. 가족중심 복지국가 (Family-centered Welfare State)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현대식 복지국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

을 구하지 못해 사회적 소외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던 노동력 잉여 시대에 고안된 산물이다. 젊은이들이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면 작금의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민족간 갈등을 살펴보기 바란다. 20세기 초 유럽과 동아시아도 유사한 사회적 폭동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당시 청년퇴직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부상했고, 근로자들이 장기적인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었다. 노인복지국가는 당시의 정치적·인구통계학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노동인력 감소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면서 선진국들은 이러한 계산 논법에서 급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너무 많은 사회적 자원을 노인층에 쏟아 붓도록 하는 사회계약은 사회경제적으로 비생산적임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년층과 유소년층 부양대상 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다. 세계 고령화 위원회가 개략적 윤곽을 고안하고 있는 고령화 정책 개혁안 중 많은 부분에서 이 점을 재점검하고 있다. 어떤 사회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족 구성의 강화라고 한다면, 가입기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이다. 젊은 연령층 가구의 생활수준 하락을 초래하는 세금인상이나 강제적 저축 의무 또한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이다. 어찌되었건, 급증하는 노령 인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정책은 이제 출산율에 미치는 악영

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중심복지국가”(family-centered welfare state)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출산의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혼은 저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혼 보너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한 자녀 이상 가정에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현금 보너스, 현물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셋째와 넷째 자녀를 둔 가정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과 탁아를 위한 공공 보조금 확대도 자녀를 둔 가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인적 자본 구축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금인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아이가 없는 가정에 과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자녀를 갖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상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公益)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복지혜택에 무임승차를 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결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도 이미 입증되고 있듯이, 여성의 고용 상태는 가족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업무에 대해 여성에게 동등한 급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는 특히 산업국가 중 남녀간 급여 차이가 가장 큰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주는 자녀를 둔 여성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자녀와 노인 친인척을 보살피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훨씬 더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제공하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성별 낙태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서 이 목표가 달성 되면 한국은 2050년 여성 100명 당 남성 108명이라는 성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프로그램의 비용 최소화와 가족구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화 정책은 생산적 고령화라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금 수급자의 심신이 허약해지는 70대 후반이 되기 전까지는 공적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조기 퇴직은 저축과 장애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의무적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연금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퇴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만드는 것이다. 장애 프로그램은 일찍 병이 들었거나 장애가 된 노인 근로자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최고령 근로자에게는 낮은 소득세와 저축요건 완화와 같은 특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고령화의 사회적 가치가 널리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는 50년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중년기에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연금으로 지출될 수도 있는 돈을 기술 재교육에 투자하여 말년의 커리어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정될 노동법에서는 노령층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령층 근로자들의 기력이나 기능이 감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인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사

회에서 가족구성을 이민이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강화시켜줄 수는 있을 것이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의 47% 미만인 한국에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1년에 수십만 명의 신부를 영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인구를 흡수한다고 해서 남한의 고령화 인구 구조에 의미 있는 영향이 미칠 것 같지는 않다. 2050년 남한은 한반도 노령층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인구의 연금수급인구 부양비율은 남북한을 합쳤을 때 1.8, 남한만 따졌을 때 1.3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이 되는 경우, 노령층과 (이상적으로 말해서) 유소년에 대한 부양 필요성이 모두 증가하는 시점이 되면, 대규모 흡수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남북한 노령인구 부양비율: 2050년

남한	1.3
북한	3.3
남북한	1.8

5. 결론

세계 고령화 위원회는 주로 연금, 무역, 노동 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춘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권고안은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일부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양국 모두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다른 모든 정책적 조정안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을 재정적·경제적 재

난으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비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나머지 도전과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심각한 인구감소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고 금세기 말 한국은 인구와 함께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⁴⁾.

동 위원회는 인구감소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현대식으로 약간 수정된 형태의 노인복지국가 유지를 골자로 하는 전략 중심으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한국(그리고 정도는 좀 덜하지만 일본과 일부 EU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각한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노인복지국가 모델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다. 단기간 내에 가족구성을 강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심각한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들 사회는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여자아이는 훗날 결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이치다. 다시 말하면, 과거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출산율의 결과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현재의 사회모

형 하에서는 인구감소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노인 부양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출산을 가계 경제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여기는 한, 이러한 부양 부담은 출산율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경제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한국은 노인층 인구의 생산적 활동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는 가족중심복지국가(family-centered welfare state) 모델 하에서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를 노인층의 이해관계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후 노인복지국가로부터의 과감한 이탈을 시도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한국과 기타 다른 국가의 인구 추이를 볼 때 그러한 시도는 순전히 필요에 의해 조만간 널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이 모형 개발에 선구적 역할을 해 줄 수만 있다면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선진 서방세계와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은 희망의 횃불이 될 것이다. 본문

4) Commission on Global Aging, *The Challenge of Global Aging: Report to World Leaders on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Global Aging*, December 29, 2001.